

2019

발간년월 2019년 11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제11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장영태 홈페이지 www.kmi.re.kr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 실장
(swpark@kmi.re.kr/051-797-4562)
황재희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전문연구원
(jhwangk@kmi.re.kr/051-797-4728)
이호림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holiml@kmi.re.kr/051-797-4720)
윤영준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ynunbit@kmi.re.kr/051-797-4564)

어촌뉴딜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생활 SOC 등 인프라 현대화와 어촌사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어촌주민과 지자체의 기대는 높다. 하지만 어촌뉴딜 2차 공모사업(2020~2022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촌뉴딜 정책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어촌뉴딜의 현장에서는 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협 의체는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 300개소에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어촌뉴딜 정책은 행정뿐만 아니라 어촌현장에서 어촌뉴딜의 개념, 추진방식, 사업목표 및 성과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의 목표, 성과의 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실행에 따른 현실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 SOC 정책동향과 어촌뉴딜 공모 추진상황,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단계별 평가체계와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핵심적인 성과평가 체계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전문가, 용역기관, 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사업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현안연구를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① 사전 준비단계, ② 계획수립 단계, ③ 사업시행 단계, ④

사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가(부처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 →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특히,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1차 관문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뉴딜의 주민주도와 지역혁신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어촌뉴딜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8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의 근거규정과 국책연구기관과 협력기관 등의 거버넌스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 행정, 해양수산부, 전문가 등 수요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취약지역 기반확충을 위한 생활SOC 정책으로 어촌뉴딜300 추진

■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배경 및 개념

- 어촌은 풍부한 자연환경, 해양, 수산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인프라 및 콘텐츠가 부족하여 지역 간 격차가 커져 일부 어촌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어촌뉴딜은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감소 등 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SOC 일환으로 마련됨
- ‘어촌뉴딜 300사업’은 소규모 항포구 등 어촌지역의 300개소를 현대화하여 어촌을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는 사업임
 - 해상교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접근성 제고
 - 어촌의 핵심자원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활력 있는 어촌 조성

■ 어촌뉴딜 1차(2019~2021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 어촌뉴딜 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총 143건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70개소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음
- 1차 공모 사업지역 70개소 중 도서어촌과 연안어촌은 각각 30개소, 40개소, 여객선이 운항되는 소규모 항포구는 24개소로 나타남

표 1. 어촌뉴딜300 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단위: 건, %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청	143	4	7	3	3	1	13	56	6	37	6	3	4
선정	70	1	5	1	1	-	6	26	5	15	5	2	3
(비중)	100	1.4	7.1	1.4	1.4		8.6	37.1	7.1	21.4	7.1	2.9	4.3
도서	30	-	4	-	-	-	3	12	4	5	1	-	1
연안	40	1	1	1	1	-	3	14	1	10	4	2	2
여객	24		1				2	11	3	6			1

자료: 관계부처합동,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2019, p.7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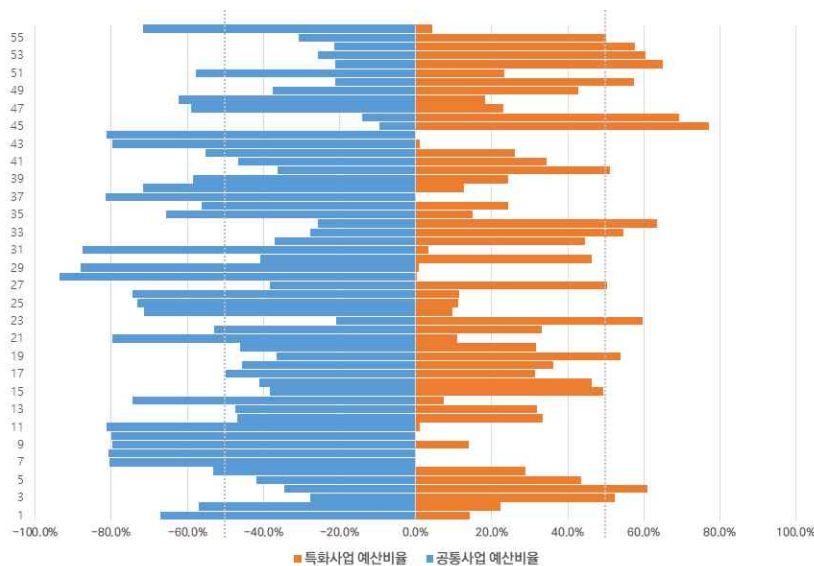
■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 본 연구는 70개 선정된 지역 중 기본계획이 확정된 5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유형, 성과지표, 지역 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반영 등을 분석하였음

-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업시설별 예산비중은 생활SOC 개선이 포함된 공통사업이 63.7%, 특화사업 33.7%, 소프트웨어사업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통사업은 방파제 정비, 어항시설정비, 해상교통시설 정비사업에 편중되어 생활편의시설과 안전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
- 특화사업은 해양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이 약 68%를 차지하고, 생활 SOC인 정주여건 개선은 32%로 나타남
- 역량강화사업은 교육이 47%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보·마케팅 28%, 컨설팅 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기본계획의 예산배정 비율(공통사업 vs 특화사업)

단위: %



자료 :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56개)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평균 4.1개로 나타났고, 성과지표가 7개인 지역이 1개소, 성과지표가 없거나 1개만 제시한 신청지역도 4개소로 나타남
- 성과지표는 ‘관광객수 증가’가 40개소(71.4%)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역량강화’ 38개소(67.9%), ‘정주/SOC 등 주민 삶의 질 만족도’ 37개소(66.1%), ‘소득원 창출’ 28개소(50.0%), ‘일자리 창출’ 21개소(37.5%)로 나타남
- 지역협의체 구성은 평균 13.6명으로 지역전문가는 10.6%, 분야별 전문가는 18.9%, 행정 21.3%, 지역주민은 57.6%로 나타났으며, 지역협의체 위원장으로 어촌계장이 80%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에 의해 제시된 자문 및 검토의견은 총 1,251건으로, 이 중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395건(31.6%), 부분반영 184건(14.7%), 반영예정 528건(42.2%), 미반영 144건(11.5%)로 나타나 반영예정인 528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도시·농촌, 섬 등 지역개발사업, 단계별 평가요소 차별적으로 구성

■ 도시재생 사업, 사업 단계별로 평가체계 구체화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는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종합 성과평가로 구성됨
 - 연차별 평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별 모니터링을 의미함
 - 종합 성과평가는 사업추진 4년차 이후부터 확인되는 효과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종료 후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해당함
- 이러한 특징은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들이 유관 특별법 및 상위계획을 통해 평가요소 및 방안을 비교적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임
 - 연차별 평가지표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지역 및 사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됨
-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사업지는 지역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모니터링·성과 지표를 직접 개발하여 활용함
 - 가령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거지구 지표 24개, 상가지구 지표 20개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모니터링·평가지표도 전주와 같이 주거지구, 상가지구 대상의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패널티로 사업효과성 제고

- 이러한 방식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위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함
 - 사업 유형을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사업 부문으로 분리하여 각 부문에 대한 사전평가(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집행평가(실적)를 수행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는 사업집행 단계의 자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내용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전문가 그룹의 집행결과 평가로 진행됨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산출(Output) 지표, 결과(Result) 지표, 파급효과(Impact)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함

■ 도서개발 사업의 평가체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관리 부분이 비교적 취약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이르는 10년 단위 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평가내용은 사업관리 및 사후평가보다는 사전 타당성 검토에 치중되어 있음
 - 제4차 계획에서만 1,256개 사업에 1조 5,132억원의 재정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업규모와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평가 및 피드백 과정의 부족은 평가체계의 한계로 지적됨
-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사업단위 및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된 반면, 시범사업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이 단절된 관계로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임

표 2. 정책 분야별 평가체계 비교

분야	사업명	평가체계	평가주체	시기
도시 재생	도시 재생	• 사업 단계별 평가(준비-계획-집행-관리) • 지자체 TB별 자체 모니터링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준용)	• 도시재생지원기구 • 국토교통부, 지자체	매년, 4년 (종합평가)
	서울형 도시재생	• 사업 집행과정 평가에 주력(모니터링, 외부평가, 종합평가, 컨설팅으로 구성) • 공통지표, 지역특화지표로 구성	• 외부평가위원회 • 자가진단, 지자체	매년, 2년 (종합평가)
지역 개발	성장촉진 지역개발	• 사업 단계별 평가(사전평가, 집행평가) • 모사업(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 분리 평가	• 전문기관(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지자체	매년
	일반농산 어촌개발	• 투입요소(거거, 실적-결과-효과) 지표 구성 • 평가결과로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 시도 전문가 그룹 • 농식품부, 지자체	매년, 5년 (사후평가)
도서 개발	도서종합 개발	• 타당성 평가 중심(계획-사업타당성, 메타평가) • 목표 적절성, 내용 적합성, 절차 합리성 지표	• 행안부, 지자체	10년 (최종평가)
	가고 싶은 섬 (시범)	• 사업 단위별 평가(총괄, 섬별, 사업별) • 사업 유형별 평가(하드·소프트·휴먼웨어)	• 평가위원단(실사) • 문체부	5년 (최종평가)

자료: 저자 작성

어촌뉴딜, 사업 단계를 고려한 평가체계 구성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관리 지원 필요

■ 사업 단계별 평가방법 체계화는 평가의 효율성 및 결과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평가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주요 투입요소에 기반하여 산출, 결과, 파급효과 지표를 설정하는 지표 구성방법도 주요하게 참고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지표체계 구축은 사업의 목표와 실제 투입내용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 구성을 공통지표와 지역특화지표인 KPI (Key Performance Index)로 이원화하는 것도 사업·지역별 고유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300 평가에 유용함

- 법적 근거 마련과 외부평가위원회·전문평가기관 구성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는 절차적 기반 마련 필요

그림 2. 유사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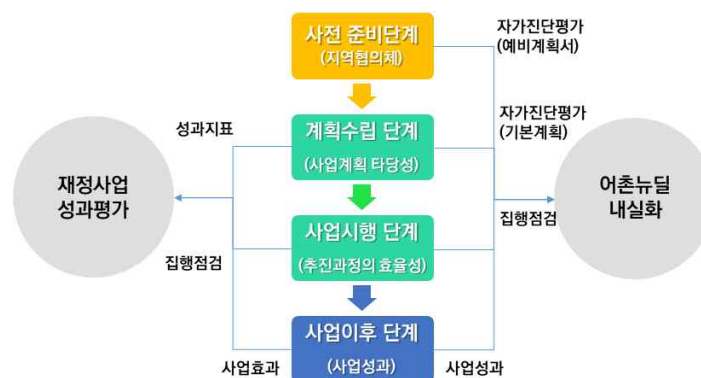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재정사업 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 도모

■ 단계별(사전 준비 → 계획수립 → 사업시행 → 사업이후) 성과평가 체계 추진

-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는 단계별 평가(① 사전 준비단계 → ② 계획수립 단계 → ③ 사업시행 단계 → ④ 사업이후 단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핵심과제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획, 시행,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의 내실화를 위해 각 단계별 점검사항을 강화하고,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

그림 3.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안)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뉴딜 핵심요소의 조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마련

- 지역협의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과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여부를 기록하고, 그 결과가 예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인과관계가 정립되어야 함
- 어촌사회는 고령화와 지역전문가의 부족으로 공동체 역량기반이 취약해 어촌뉴딜을 준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시행, ②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등, ③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등 어업공동체가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예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자기진단평가(또는 사전점검평가)를 통해 공모 참여여부를 결정함으로 예비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① 주민주도로 사업계획안 마련 여부, ②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정합성,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등의 점검평가가 필요함

표 3. 사전 준비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지역협의체	① 지역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 어촌계, 어촌주민 중심의 구성은 지양되어야 함 - 수협, 행정(시군, 읍면), 지역전문가(연구소, 대학), 관광업체 등	지역협의체 구성 시 구성원 및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②-1 지역협의체 회의(워크숍) 개최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참석자별 의견내용 / 결과 ②-2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 지역협의체 운영과 예비계획 간 인과성(문제진단 및 사업발굴)	① 회의개최 여부 ※ 최저기준 ○회 이상 ② 결과보고서 첨부 ※ 첨부 vs 미첨부 ③ 결과보고서 첨부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 지역현안과 문제진단의 정확성 - 사업별 타당성 검토 - 성과지표 적절성(어촌뉴딜 정합성, 산정방식 객관성/신뢰성)	① 현안 및 문제진단 ※ 적합 vs 부적합 ② 사업별 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성과지표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공동체 역량강화	①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 어촌뉴딜 개념 / 정책목표 / 추진방식 / 기대효과	어촌뉴딜 공론화 ※ 시행 vs 미시행
	② 선진사례 견학 등 - 사업방향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지역 방문 -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사업방향 구체화 계획	조사 결과보고서 ※ 적합 vs 부적합
	③ 전문가 역량교육 시행 - 관련 전문가 섭외의 전문성 -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점검	역량강화 교육 평가 ※ 최저기준 ○회 이상 ※ 적합 vs 부적합
예비사업계획	①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 - 주민참여도를 점검 - 예비계획서에 주민의견 반영정도	① 주민참여도 ※ 적합 vs 부적합 ② 주민의견 반영도 ※ 적합 vs 부적합
	②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정합성 - 핵심 성과지표와 특화된 성과지표 마련 여부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및 도입시설과의 정합성 - 성과지표 산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 시설 및 사업구상의 적절성 / 실행가능성 / 이용규제 검토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 사업효과 기대효과	사업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주 : 자기진단평가는 정량적인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모든 점검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뉴딜 사업추진의 시작점, 계획수립 단계 점검·평가의 강화

-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은 어촌뉴딜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사업추진의 배경과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 요소로 ① 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등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②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③ 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발굴 등의 핵심요소를 평가항목(안)으로 제시함
-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은 용역기관이나 전문가 참여와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의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진단평가와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이 필요함
- 기본계획의 타당성은 어촌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① 성과지표의 합리성(핵심 성과지표와 추진과제의 적절성), ②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피드백, ③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④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함

표 4. 계획수립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주민주도의 현안발굴	① 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①-1 지역협의체 기능과 역할 - 지역협의체가 사업계획에 맞는 주체와 이해관계자 구성 여부 - 구성원 역할과 참여도 (어촌주민 참여도 최소 50% 이상) ①-2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성과 점검	① 지역협의체 역할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성과 ※ 적합 vs 부적합
	②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 어촌뉴딜에 대한 지자체 역할 및 지원 내용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성과 지원 등)	행정기관 지원 ※ 적합 vs 부적합
	③ 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발굴 - 현안 및 문제진단의 적절성 (생활 SOC 제고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관광 활성화 등)	현안/문제진단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①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와 운영 - 전문가의 미스매칭 여부(사업내용 vs 전문가 전문분야) -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정 -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	① 전문가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전문가 참여도 ※ 최소 0명/0회 이상
	② 용역기관 전문성 - 사업계획(사업내용)에 충실한 용역기관 전문성 매칭 (지역재생, 어항분야 엔지니어링, 경관디자인, 관광 등)	용역기관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기본계획(설계) 타당성	① 합리적인 성과지표 - 성과지표 정합성(사업계획 목표 vs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어촌뉴딜 목표 부합 여부 - 성과지표의 정량화, 객관성, 신뢰성 확보	성과지표 합리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환류 - 전문가 의견의 반영의견 및 조치사항 명확성 - 기본계획 협의과정 전에 자문의견의 환류과정 완료 (전문가 의견 → 의견 조치 → 전문기관 점검평가 → 환류 → 반영예정 없이 완료)	자문의견 환류 ※ 적합 vs 부적합
	③ 기본계획의 적정성 - 시설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행가능성 / 법·규제 검토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 시설의 사업주체와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담보	기본계획의 적정성 ※ 적합 vs 부적합
	④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권역 내 유효한 타 부처 계획의 제시 -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방안 제시 (단순하게 타 부처 계획의 나열은 지양)	타 부처 계획 연계성 ※ 적합 vs 부적합

주 : 자기진단평가는 정량적인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모든 점검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뉴딜 효율적 사업추진 점검·평가, 사업시행 단계

- 기본계획 또는 설계는 현장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이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계획대로 변경 없이 집행되거나 조정 시 변경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단계적 시행은 어촌뉴딜의 각 권역별, 지역별 예산집행이나 사업지에 대한 완공률 등 공정관리를 통해 행정적인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어촌뉴딜을 통한 사업에서도 여객터미널, 화장실, 관광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가 가급적 지역의 어업공동체로 구성되고 있는지도 점검, 구체적인 운영방법, 운영관리 예산 마련 등 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

표 5. 사업시행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① 시행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점검 - 사업계획대로 사업집행 여부 점검 평가 (전문기관 모니터링)	① 사업지 관리 ※ 적합 vs 부적합
	②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및 경과 -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이행 및 점검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사업변경 협의 ※ 적합 vs 부적합
단계적 시행	① 예산집행 실적 -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월별, 분기별, 연차별) 점검	예산집행 모니터링 ※ 주기별 점검
	② 분기별 완공률 실적 - 사업공기에 따른 완공률을 분기별로 점검	완공률 모니터링 ※ 분기별 점검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①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의 명확성 - 운영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의 주체의 명확성 - 주체는 지역공동체로 중심으로 구성	시설 운영관리주체 ※ 적합 vs 부적합
	②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 시설 운영관리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운영관리 예산 등 지속가능성 담보	운영관리 지속성 ※ 적합 vs 부적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뉴딜 정책목표 달성정도와 성과효과 평가, 사업이후 단계

- 어촌뉴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면과 강마을 지역재생에 대해 통합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공간위 계별(개별 사업권역, 시군구, 시도, 전체), 사업목표(삶의 질 개선, 관광객 유입효과, 소득일자리 창출 등)의 달성정도를 점검해야 함
- 어촌뉴딜의 사업효과는 크게 주요 성과지표(KPI) 변화의 측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이원화하여 시행되어야 함
 - 핵심 공통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점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 핵심 성과지표의 선정은 어촌뉴딜 정책을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도입사업, 추진방식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최대 3개 이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어촌뉴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 고용, 생산유발)에 대한 분석을 지역단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표 6. 사업이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어촌뉴딜 사업성과	① 사업유형별 성과 측정 - 국민휴양형,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핵심 성과 측정 ※ 유형별 성과평가
	②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 공간위계별 사업목표 달성 이행·점검 (사업권역 / 시군구 / 시도별 / 전체 사업목표) - 어촌뉴딜 사업목표에 달성 점검·평가 (삶의 질 만족도 / 관광객 유입효과 / 소득·일자리 창출 등)	사업목표 달성 점검 ※ 사업목표/공간위계별
어촌뉴딜 사업효과	① 주요 성과지표(KPI) 효과 측정 - 핵심 공통 성과지표의 도출 - KPI 연차별 측정 (사업완료 이후 5년)	공통 KPI 모니터링 ※ 최소 3개 이상
	②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 부가가치 유발 효과 / 고용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파급효과 모니터링 ※ 1차 사업완료 이후 (2022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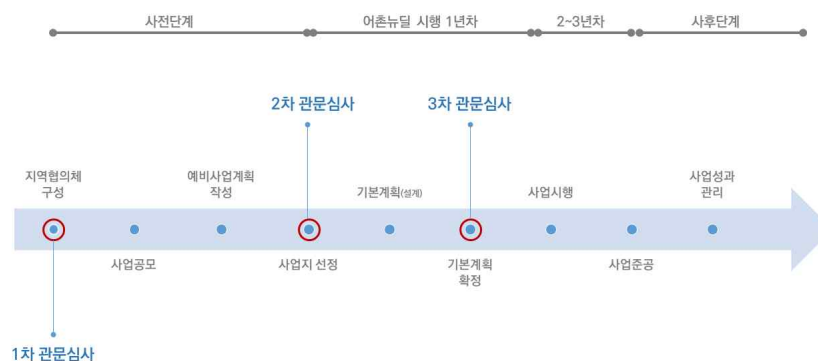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 관문심사(Gate Assessment) 및 자기진단평가 체계 도입

-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이르기 까지 사전준비·계획수립 단계는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체크포인트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어촌뉴딜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업지 선정과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

그림 4. 어촌뉴딜 관문심사 제도 도입(안)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자기진단평가는 관문심사 시 해당 지자체와 지역협의체가 스스로 자기진단평가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이 점검·평가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의성과 이해충돌 등을 최소화해야 함
- 1차 공모사업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어촌뉴딜 자기진단평가 체계 (S.A.S : Self Assessment System)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어촌어항법」 제47조의8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성과평가의 실시 근거,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7.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현행	개정안
신설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평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업 완료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저자 작성

■ 어촌뉴딜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업무는 현행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단을 기존 수행업무(한국어촌어항공단)와 별도로 분리하여 국·공립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함
- 시도연구원은 시도별 공모사업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전문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함
-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사업(예정)지 점검·평가에 대한 결과와 연차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으로써 어촌뉴딜 정책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 어촌뉴딜은 300개소가 2022년이 되면 공모,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성과평가 등이 전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주체의 니즈에 대응해 나가고, 어촌뉴딜에 대한 수요자 니즈분석, 평가시스템(조회, 입력, 환류 등), 정보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2019.09.04.
제2호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2019.09.05.
제3호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2019.09.10.
제4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9.09.11.
제5호	항만 대기질 특별법 이행에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 필요	2019.09.17.
제6호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정립' 요구	2019.09.20.
제7호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산업계와의 협력이 관건	2019.09.23.
제8호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관한 연구	2019.11.05.
제9호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2019.11.06.
제10호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9.11.08.

URL: <https://www.kmi.re.kr/>